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이송 즉시 거부권”

야당 의원 180명 참여 전원 찬성...국힘 강행처리 항의 표결 불참 50억 클럽 특검법도 가결...대통령실 “총선 겨냥 선거용 정치공세”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가 전직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50억원을 주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관련 법안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할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라 자동 상정된 이들 2개 법안을 의결했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181명 참여한 표결에서 전원 찬성으로 처리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 표결에는 야당 의원 180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이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특검법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3일 안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정당에 의뢰해야 한다.

특검 추천권을 가진 정당이 대통령 의뢰 후 5일 안에 10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 중 1명으로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특검법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은 특검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힘을 배제했다. 추천권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행사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와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기타 상장회사 주식 등 특혜 매입 관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 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사건이다.

법안은 특검이나 특검보가 국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50억 클럽 특검도 추천 절차는 김 여사 특검과 동일하지만, 민주당도 특검 후보자 추천에서 배제된다.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15년 경력 이상의 변호사에 대해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한 불법행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명시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쌍특검법 강행 처리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거용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고 야당에서는 야당이(특검을) 임명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여야 합의로 그렇게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도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선거 직전에, 노골적으로 선거를 겨냥해서 법안을 통과시킨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 이후 보완 조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나머지 필요한 메시지는 추가로 검토해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만난 정세균 “당 분열 수습 대표 책임...필요할땐 결단해야”

선거 앞두고 혁신경쟁 선도 당부

28일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갖고 내부 분열상을 수습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같은 취지의 조언을 전해 들은 바 있어 향후 당 내홍 수습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1시간 40여 분간 배석자 없이 오찬을 함께 했다.

정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단합이 선거 승리의 필요 조건”이라며 “검찰독재로 가는 길을 막는 게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최근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모양새라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당의 분

열을 막고 수습할 책임과 권한은 모두 당 대표에게 있으니 책임감을 갖고 최근 상황을 수습하길 부탁한다”고 했다고 권철수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현애살수(懸崖撒手)’라는 사자성어도 언급했다. 이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잡고 있는 손을 놓는다는 뜻으로, 지난 2006년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의장직을 사퇴할 때 쓴 표현이기도 하다.

권 수석대변인은 “(정 전 총리가)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라며 “그렇게 하면 당도, 나라도 대표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결단”의 의미를 묻는 말에 권 수석대변인은 “특단의 대책이나 과감한 혁신을 이야기하셨기에 비상대책위원회나 2선 후퇴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앞두고 양당 간 혁신 경쟁을 선도해 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그 말에 (결단의 뜻이) 포함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와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한 통합 비대위 구성을 촉구했는데, 정 전 총리가 말하는 결단은 이와는 다를 것이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오전에서 비대위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고 권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정 전 총리는 “공천은 매우 스마트하고 나이스하게 진행해 분열 양상이 없게 해야 한다”며 공천 문제에도 ‘손소리’를 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총리 등 문재인 정부 ‘3총리’가 공천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으나, 정 전 총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총선에) 아무 역할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달 9일 처리

“국힘과 합의 안되면 원안 의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의 ‘데드라인’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9일로 정했다.

그때까지 여당과 합의되면 원안에서 특검 관련 조항을 없애고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처리하고, 합의 불발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오찬 회동 및 의원총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처리 방안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까지 여당과 합의하지 못하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의장 중재안을 반영해 단독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원내대표 간 회동 후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임 원내대변인은 “회동에서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가 여당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부와 협의할 시간이 없었으니 의장 중재안을 갖고 정부를 설득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 1월 9일까지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익표 원내대표가 의장과 다시 한번 논의해 의장 중재안으로 합의의 처리를 하겠다”며 “민약 1월 9일까지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겠다고 김 의장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홍 원내대표가 의장을 다시 면담해 약속받은 것으로, (여야간) 합의가 되면 9일 의장 수정안을 처리하지만, 합의를 못 하면 민주당 안으로 처리하기로 김 의장이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채도 상병 순직 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추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부, ‘킬러규제 혁파’ 10개 분야 선정

정부는 개선이 필요한 규제 분야를 10개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 내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술청사에서 방기선 국조실장이 주재한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 관계부처, 경제 6단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벤처협회,

시도지사협의회가 참석했다.

기업-업계, 지자체 참석자들은 투자와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추가로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점경지역 입지 ▲해양·섬 지역 ▲인증 ▲조달 ▲불합리한 시장구조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유전자 활용 기술 ▲폐자원 등 재활용 ▲환경 배출 ▲산업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킬러 규제 10

개 분야를 선정했다. 선정된 킬러규제는 분야별 전담 작업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경제단체들은 일정 기간 규제를 중단 또는 완화하는 제도인 ‘한시적 규제 유예’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제도는 2009년과 2016년 등 경제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한시적 규제 유예 대상과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땐!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남부대학교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선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 복권위원회 | 사랑의일메